

이순신대교 항구적 안전 대책 마련한다

전남도 수직받침장치 등 손상 원인 등 전문가 의견

검증 후 연내 보수·보강 완료...특수포장재 선정 분할 포장도

지난 2013년 2월 개통한 후 전남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이순신대교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과광양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2.26km의 국내 최대경간 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는 이 같은 큰 규모와 함께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남도는 21일 "이순신대교 일부 손상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정성 검증 등 전문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순신대교의 수직받침장치와 충격흡수시설의 일부 손상에 대해 시공회사와 당초 설계사가 마련한 보수·보강대책을 항구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내최고 교량전문기관인 교량학회에 의뢰한 것이다.

수직받침장치는 교량상판의 뜨는 성질을 교각과 연결해 제어하는 장치, 충격흡수 시설은 교량상판에 갑작스럽게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제어하는 장치다.

검증기간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검증 완료 후 연내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결합이 발생한 곳은 긴급 조치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잦은 하자에 대해 다각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교량학회, 서울대 등 해상교량 분야 전문가와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주요 손상 발생 원인으로 수직받침장치의 앵커 볼트의 녹 발생,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상부의 반복적인 충격 피로 하중, 지난 2014년 도로포장 보수 시 양각 가림막설치로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와류 현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순신대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

상판에 예폭시포장을 도입해 시공한 바 있으나 기온 변화와 대형차량 통행 등의 영향으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해 지난 2018년 4월 다양한 특수제품 시험포장을 실시한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교량에 맞는 최적의 포장재 선정을 위해 기준에 충족한 포장재를 분할 포장해 장기적인 성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의 빈틈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안정성 검증을 통해 이순신대교의 1000년을 책임지고, 특수제품 포장 등을 통한 미래 교량포장의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 광주시, 73억 투입 추진

생활기반 등 13개 국토부 사업 선정

광주시는 "73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기반 9개, 환경 문화 3개, 생활 공원 1개 등 사업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37억원 증가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만, 거주민들은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01년부터 211개 사업에 국비 733억원, 지방비 184억원 등 917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화전 정비, 누리길 조성, 경관 사업 등을 추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드론공원·실기시험장 지정 기념행사 19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드론비행연습장에서 관련부처와 교육기관, 드론협회 원 등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 실기 시험장 지정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참석자들이 축하 드론비행 퍼포먼스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전남도 용역 보고회...교육·보육·의료시설 등 재정지원 등 담겨야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특별법에는 인구소멸지역의 교육·보육·의료시설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재정 지원, 조세특례 강화, 지역발전정책과 제도 발굴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인구정책을 지원할 새로운 국가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 활력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비교우위 발전정책 발굴과 함께 법인세 감면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면 경북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비롯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한 정부와 국회 건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은 경북과 공동으로 추진중이며, 용역은 올해 9월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익직불제 시행 '쌀값 안정 대책' 건의

전남도가 정부에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쌀값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 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을 선제적으로 잡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제 물량을 시장격리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부터 적용될 쌀수급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초과물량을 매입하게 된다. 전남도는 정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시 시장 격리를 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된 만큼 전년가격보다 2% 이상 하락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쌀값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난 몇 년간 사례를 볼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쌀수급안정제가 시행된 만큼 쌀 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한 공급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하수도 시설물 정확도 높인다

울 225km 구간에 11억원 투입
안전사고 예방 개선사업 나서

광주시는 "225km 구간에 이르는 하수도 시설물 위치와 깊이 정보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확도 개선사업 중 발견한 지반침하(공동) 의심지역 14곳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고, 도심 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조사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이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대한 공간정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특정건물로부터 시설물까지 거리를 측정할 기존 지저관측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위성통신을 활용한 측정 정보로

개선해 위치, 깊이, 관 재질 등 다양한 정보를 갱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주요도로 2400km 구간의 '하수도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예정노선과 정확도가 낮은 지역부터 1536km 구간의 정보를 갱신한 바 있다.

정확도 개선사업 중 발견한 지반침하(공동) 의심지역 14곳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고, 도심 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조사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이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대한 공간정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현장 경정의 날' 민원 소통 창구 자리매김

광주시가 시민의 목은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작한 '현장 경정의 날' 행사가 민원 소통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 취임 후 모두 16차례 진행한 현장 경정의 날 행사에서 제안된 안건 중 5건이 해결됐다. 8건은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며 3건은 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등 단계에 있다.

첫 행사에서 제기된 각화초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100m 길이 후문 통학로

공사가 완료됐으며 234m 연장 공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동 시외버스 정류소 화장실 개선, 월곡동 하남부영아파트 CCTV 설치의 각각 급고속, 부영주택과 협의해 해결했다.

금호동 도시공사 1단지 주변에서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보행로를 잠식하면서 답을 허무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주민 간 협치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수목장 14%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남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